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에 관한 연구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정섭\* · 은석인\*\*

### A Study on Job Creation and Spatial Mismatch in Jeollabuk-do: An Evaluation of Korean Regional Employment Survey Micro-data

Chung Sup Lee\* · Seog In Eun\*\*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군산·익산·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일자리 창출, 승수효과, 직주불일치, 지역별고용조사, 지역노동시장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at Jeollabuk-do 14 cities and counties's job creation policy would lead to a virtuous circle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measuring the ratio of spatial mismatch. We suppose that the higher proportion of spatial mismatch in a city or county is, the lower multiplier effect contributes the local economy, especially in the income of residents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Korean Regional Employment Survey Micro-data and calculates the labor demand self-sufficiency(LDSS) rate of every local labor market for measuring the degree of spatial mismatch. Also we calculate the LDSS rate of employment status, industry, job classification and wage for testing the independency of local labor market. After analyzing, just Jeonju, Gunsan, Iksan, and Namwon c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local labor market where LDSS rates are above 75% in most criteria. But other local labor markets depend on outer labor suppl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reation of 'good jobs' that can induce the labor in parallel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employment.

**Key Words** : job creation, multiplier effect, spatial mismatch, RES, local labor market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isup@jbnu.ac.kr

\*\*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unseogin@hanmail.net

### 1. 서론

2012년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구규모가 약 189.5만 명인 전라북도 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제발전예 수반된 지역 간 인구이동,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의 집중 과정에서 대규모 인구유출이 발생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지역은 인구이동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해도 양의 순이동자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무려 약 188.1만 명이 다른 시도 지역으로 유출된 곳이다.

이처럼 유출되는 인구규모를 축소하고 나아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이하 1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정책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고 이곳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산업단지 개발/조성→기업유치→제조업 일자리 창출→지역 내 주민 고용증대/타 지역에서 인구 유입→소득/소비활동 증가→서비스업 활성화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지역 전체의 고용확대와 인구증가’, 즉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기반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축대로 비기반 부문으로 승수효과가 파급, 확대

되어 나아가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순환 고리 중에서 제조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 일자리가 지역 내 주민들로 채워지지 않거나, 타 지역 주민의 주거 이동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승수효과는 단절 또는 약화되게 될 것이다. 예컨대 A라는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그 종사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의 상황에서는 관련 지역정책이 원래 기획하고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우며, 해당 지역의 경제, 고용, 침체와 낙후 등 문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그 성과는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에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직주일치·불일치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련 지역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상의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별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자료는 각 개인이



그림 1. 연구지역 행정구역 지도

주거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사업체가 입지한 행정구역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는 달리, 주거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코드와 직장 근무지역으로서 ‘사업체소재지’ 코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직주의 각각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 자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분석과정에서 ‘행정구역’과 ‘사업체소재지’ 코드의 일치하는 시군 단위에서 직주의 일치로서 창출된 일자리가 해당 시군의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또한 일자리를 따라 타 지역에서 이주가 병행된 것으로, 반면 두 코드가 불일치하는 것은 반대의 상태, 즉 창출된 일자리가 타 시군 주민들에 의해 점유되거나 이주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놓고 볼 때, 전자는 긍정의 그리고 후자는 다소 부정의 평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 2. 분석 변수의 설정과 연구흐름

### 1) 지역노동시장 공간단위로서 행정구역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주자의 통근 그리고 거주지와 일터의 공간적 분리는 그 자체의 행위·상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것의 공간적 범위의 의미, 즉 광철홍·이전(1997), 권상철(2011) 등의 연구와 같이 도시기능 세력권, 도시화 단계, 개별 도시의 특성과 변화 등을 해석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도시 내부나 중심도시에서 입지했던 제조업체와 관련 일자리 상당수는 교외나 주변 지역으로 이전되어 창출되고 이로 인해서 통근 방향, 거리, 범위 등의 공간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전라북도 14개 시군들이 탈산업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어느 정도까지의 도시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전 시기 산업화와 제조업 부문 성장에서 소외되었던 시군에서는 관련 기업

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해당 시군의 이러한 노력들이 긍정적 효과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정책들이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와 함께 공간적으로는 역통근, 인구·노동이동, 통근거리 및 권역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때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혹은 공간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Kaldor, 1970; 이상호, 2008)에 대한 해답이 우선 필요하다. 즉 고용, 실업, 노동, 통근 등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해 그 단위나 설정범위를 정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역노동시장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면, Fischer and NijKamp(1987)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거를 이동할 필요 없이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제시하였고, 이상일(1999)은 사람들의 주거지와 직장이 통근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공간단위가 지역노동시장이며, 그 공간적 범위 내의 모든 거주자는 해당 지역 범위 안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Casado-Diaz(2000)은 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 사용자들의 구인활동이 집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통근권역(Travel-To-Work Area), 미국 경제분석국의 경제지역(Economic Area), 프랑스 고용구역(Zone d'emploi) 등은 지역노동시장을 정책 투입을 위한 계획지역이자 동시에 통계적 측정의 기본 공간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각국의 사례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을 대체로 통근 기준의 결절(nodal), 기능(functional)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대안적 단위이자 통계 측정·분석권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기능지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 공간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책과 제도적으로 아직 지역노동시장 권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동우 등(2003), 박진희(2005), 이상호(2008)의 주장처럼 어떤 지표나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

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산업, 통근, 주택 등의 지표와 자료들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 공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의 일치 여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앞서 언급한 현실적 한계와 함께 이 연구의 목적이 전라북도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역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이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행정구역 기준에서 각 지역 노동시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현행 일자리 창출정책이 계획지역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 2)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통한 직주불일치의 측정

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일정비율이 이상인 해당지역에 소재한 일자리로 통근하고, 동시에 이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도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내 거주자로 고용할 때, 해당 노동시장은 지역적인 완결성·독립성을 갖추게 된다. 이때 전자는 노동수요 자급비율(labor demand self-containment rate)로서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이 되고, 후자는 노동공급 자급비율(labor supply self-containment rate)이고 지역 내 거주자 중 동일지역 취업 비율을 의미한다. Casado-Diaz(2000)는  $E$ =해당지역 거주자 중 취업자,  $O$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그리고  $I$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라고 하였을 때,

$$\text{노동수요 자급비율} = \frac{E-O}{(E-O)+I} \times 100,$$

$$\text{노동공급 자급비율} = \frac{E-O}{E} \times 100$$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이때 노동수요 자급비율은 해당지역 일자리의 직주불일치 비율과 같은 의미가 된다.

노동수요와 공급 자급비율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고, 그 독립성과 완결성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영국 지역노

동시장 단위인 TTWA는 경제활동인구가 3천 5백 명 이상인 경우에는 75%, 2만 명 이상에서는 70%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박진희(2005), 이병훈·윤정향(2010), 남기성·오민홍(2010) 등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이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해당 수치를 일차적인 준거로 활용하지만, 이미 행정구역 단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해석에는 신중함과 탄력성이 필요하다.

## 3) 하위노동시장과 좋은 일자리의 기준

지역 단위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단일시장론·신고전이론과 분절시장론·분단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박원석, 1990; Peck, 1996; 박영한 등 2001). 먼저 단일시장론의 경우, 노동시장을 일반적인 시장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하고, 노동도 특수성이 배제된 생산의 한 요소이자 상품일 따름이며 일반적인 가격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것은 하나의 노동시장만 존재하고, 노동력은 등질적이고 제한 없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격유연성, 노동과 자본의 이동, 노동력의 대체가능성 그리고 완벽한 정보와 완전경쟁이라는 전제와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작동하는 비현실성의 문제가 있다. 반면 분절시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노동력과 일자리를 쌍방향적으로 경쟁하고 대체하는 동질적인 전체량으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배분규칙이 존재하는 각각의 부분량으로 본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부분량은 결과적으로 부분 혹은 하위 노동시장으로 칭하며, 이때 각각의 부분·하위노동시장은 서로 이질적이며, 그 사이에서는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분절시장론·분단이론은 다시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단일시장론의 전제가 비현실적이어서 분절시장론을 채택하더라도, 일자리의 좋고 나쁨을 구분짓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승수효과도 높아질 개연성이 있지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계에서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제공되는 임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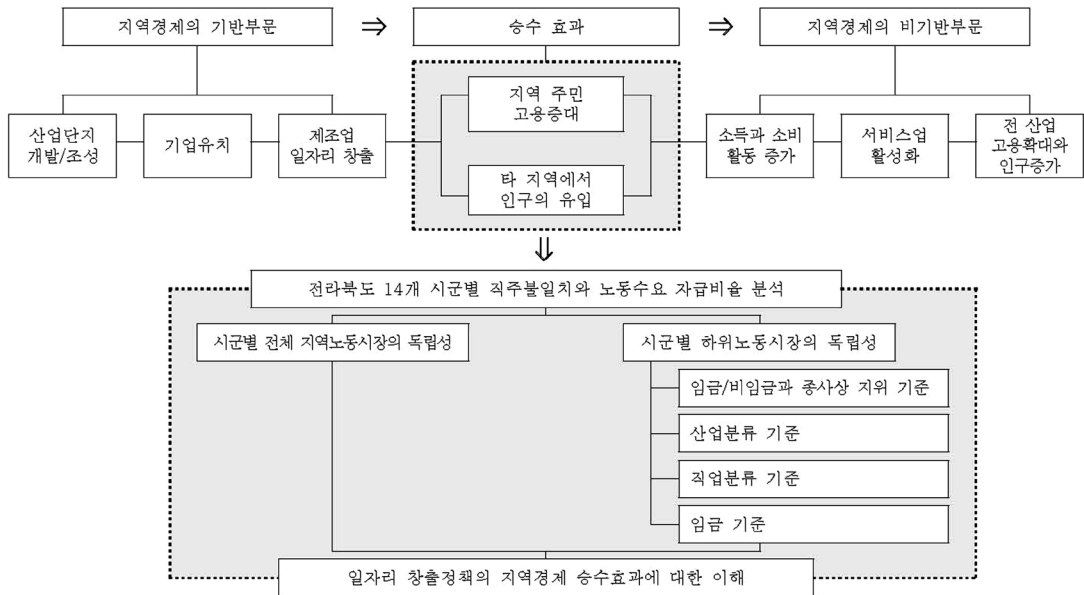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흐름

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그리고 임금을 각 시군의 하위노동시장 및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분석을 위한 변수들을 통해 그림 2와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성과

최근의 전라북도에서 개발, 조성된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7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1곳과 농공단지 9곳이 새롭게 조성되어, 전체 산업단지는 51개에서 61개로 증가하였고, 산업단지에 입지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도 각각 33.4%와 31.1% 증가하였다. 시군별로는 군산시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증가 추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데, 이것은 2000년대 중반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추가 확장되고,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신규 조성, 분양 완료에 따라 본격적으

로 사업체가 입지하고 가동을 시작한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시군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순으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정읍시와 무주군에서는 일자리의 감소가 있지만 해당 기간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종사자 수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원시와 진안군의 종사자 수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전라북도 시군에서 제조업 부문의 확대에 불구하고, 그것이 각 시군에 경제적 승수효과 또는 인구유입으로 파급되어 나갔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물론 산업 연관 등 정밀하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제조업의 확대 추세에 비해서 다른 산업, 특히 지역 경제의 비기반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서비스업의 종사자 수와 지역내총생산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시군의 인구 증가는 제조업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전

표 1. 2007년 12월~2012년 6월 전라북도 시군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명)

	2007년 12월 기준			2012년 6월 기준			일자리 증감
	산업단지 수	사업체 수	종사자수	산업단지 수	사업체 수	종사자수	
전라북도	51	1,452	53,666	61	1,937	70,346	16,659
전주시	3	169	6,102	4	260	8,410	2,308
군산시	7	276	13,190	7	525	23,971	10,781
익산시	6	411	13,342	7	443	14,987	1,645
정읍시	7	182	5,936	8	194	5,513	-423
남원시	5	50	1,316	6	69	1,447	131
김제시	7	141	3,282	7	157	3,304	22
완주군	2	84	8,222	2	82	9,699	1,477
진안군	3	31	451	3	37	317	-134
무주군	1	13	185	3	11	157	-28
장수군	2	12	302	2	16	361	59
임실군	2	20	457	3	27	617	160
순창군	2	5	15	3	36	464	428
고창군	2	25	338	3	40	496	158
부안군	2	33	528	3	40	603	75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http://www.femis.go.kr>)

표 2. 2007~2011년 전라북도 시군의 제조업과 소비자서비스업 증감률

	2007-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 증감률(%)		2007-2010년 당해년 가격 기준 지역내총생산액 증감률(%)	
	제조업	소비자서비스업	제조업	소비자서비스업
전라북도	22.45	11.77	52.90	17.82
전주시	11.61	13.03	57.47	18.50
군산시	65.13	14.83	84.65	9.78
익산시	15.03	10.20	45.50	5.03
정읍시	15.82	7.57	46.43	27.20
남원시	-2.23	8.01	22.49	22.08
김제시	0.25	15.52	34.28	11.35
완주군	15.81	7.48	20.54	18.57
진안군	-5.29	9.63	146.48	62.48
무주군	0.47	9.65	123.70	25.59
장수군	24.33	9.82	43.32	46.20
임실군	14.98	14.77	93.52	42.62
순창군	15.63	6.50	8.66	53.83
고창군	7.00	7.22	85.25	30.39
부안군	10.29	12.07	110.35	40.89

주: 소비자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http://stat.jeonbuk.go.kr>)

표 3. 2007~2011년 전라북도 시군의 주민등록인구와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

	주민등록인구(명)		제조업 종사자수(명)		2007-2011년 주민등록인구 증감(명)	2007-2011년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명)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전라북도	1,862,277	1,874,031	85,707	104,949	11,754	19,242
전주시	623,926	645,894	11,165	12,461	21,968	1,296
군산시	260,562	275,659	17,252	28,489	15,097	11,237
익산시	313,590	309,804	20,607	23,704	-3,786	3,097
정읍시	124,239	120,466	5,574	6,456	-3,773	882
남원시	89,247	87,455	3,490	3,412	-1,792	-78
김제시	97,615	93,111	7,163	7,181	-4,504	18
완주군	82,972	84,660	12,931	14,976	1,688	2,045
진안군	30,250	28,473	945	895	-1,777	-50
무주군	26,361	25,863	424	426	-498	2
장수군	26,687	23,215	711	884	-3,472	173
임실군	31,952	30,789	1,155	1,328	-1,163	173
순창군	32,035	29,497	1,107	1,280	-2,538	173
고창군	60,962	60,065	1,628	1,742	-897	114
부안군	61,879	59,080	1,555	1,715	-2,799	16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http://stat.jeonbuk.go.kr>)

표 4.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추정

(단위: 천㎡, 명)

	개발 내용	개발면적 (A)	추정 고용인구 (B)	추정 유입인구 (C)	개발면적당 추정유입인구 (C)/(A)	일자리당 추정유입인구 (C)/(B)	
군산시	새만금(산업용지)	93,000.0	18,693	32,769	0.35	1.75	
익산시	삼기·낭산지방산업단지	222.3	—	29,300	131.8	—	
정읍시	정읍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방사선/생명공학 안전성평가연구소 관련	468.0	5,700	9,500	20.3	1.67
			330.0	400	6,700	20.3	16.75
	태인농공단지		268.8	1,600	2,600	9.67	1.63
	신용농공단지		112.3	600	1,100	9.8	1.83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326.0	2,500	4,200	12.89	1.68
	정읍 제3지방산업단지		14.0	100	200	14.29	2.00
남원시	주생산업단지		1,071.0	7,711	11,500	10.74	1.49
	노암 I·II 농공단지		229.0	1,760	2,400	10.48	1.36
김제시	대동농공단지		247.0	—	600	2.43	—
	지평선일반산업단지		1,862.8	—	26,800	14.39	—

자료: 이정섭(2012), p.311.

표 5. 2008~2012년 상반기 전라북도 시군의 경제활동인구 지표 변화

(단위: 천 명, %)

	2008년 연간 자료						2012년 2분기 자료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전주시	262.7	227.4	256.2	6.5	52.3	2.5	300.7	235.8	292.7	8.0	54.6	2.7
군산시	116.2	93.8	113.6	2.6	54.1	2.2	129.3	95.9	125.7	3.6	55.8	2.8
익산시	134.6	93.4	131.7	2.9	57.8	2.1	123.8	108.3	122.7	1.1*	52.9	0.9*
정읍시	51.6	38.3	50.5	1.1	56.2	2.1	53.0	36.7	51.9	1.1*	57.9	2.0*
남원시	42.5	24.9	41.4	1.1	61.4	2.6	43.1	22.2	42.7	0.3*	65.5	0.7*
김제시	43.9	28.3	42.7	1.2	59.2	2.7	45.2	25.7	44.9	0.3*	63.3	0.7*
완주군	39.7	23.6	39.1	0.7	61.7	1.7	39.2	25.3	38.5	0.7	59.7	1.7
진안군	14.8	5.5	14.6	0.2	71.8	1.1	13.3	6.2	13.3	0.0*	68.2	0.0*
무주군	13.5	5.5	13.3	0.2	69.8	1.6	13.3	6.0	13.1	0.1*	68.1	0.9*
장수군	12.8	4.9	12.6	0.2	71.1	1.9	12.6	4.8	12.6	0.0*	72.3	0.4*
임실군	16.1	6.9	16.0	0.1	69.4	0.7	15.1	7.2	15.0	0.2*	67.0	1.0*
순창군	15.3	6.8	15.1	0.2	68.3	1.4	15.3	6.9	15.2	0.1*	68.2	1.0*
고창군	31.4	14.4	31.0	0.4	67.7	1.3	30.6	15.9	30.4	0.2*	65.4	0.7*
부안군	29.8	15.5	29.4	0.4	64.8	1.4	29.4	15.7	29.3	0.0*	65.1	0.1*

주: 상대표준오차(C.V.)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라북도 시군 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들에서는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일자리 증가분에 대해 기혼율, 평균가구원수, 3차 산업 승수, 유입률 등의 여러 계수값을 곱하여 산업단지에서 일자리가 하나 창출되면 적게는 1.36명에서 많게는 16명 이상의 인구유입을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구유입은 이러한 기대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비해 인구유입 수준은 낮지만, 해당 시군에서 기존 실업상태에 있던 주민 또는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 5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전라북도 시군의 취업자·실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인구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추정 가능한 논리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라북도 각 시군 산업단지 혹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다른 산업 부문, 인구, 그

리고 경제활동 지표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시군 단위 행정구역 경계를 넘겨 이루어지는 통근과 직주의 불일치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첫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소재지 행정구역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자의 주거지 행정구역 기준으로 작성됨으로 인해 실제 해당 시군 일자리 창출이 지역 내 파급되는 영향력 분석에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비록 전라북도 내에서 광역 대도시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수 있지만, 수위도시인 전주시에서는 탈산업(post industry)과 고용의 교외화가 나타나지만 주거기능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권상철(2011)의 주장처럼 한국적 도시화와 소비도시(consumption city) 등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중심도시 전주시에서 주변 시군의 역통근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1995



표 6. 1995~2010년 전라북도 시군의 유출과 유입 통근자 수 변화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유입 통근자수	유출 통근자수	유입-유출 통근자수	유입 통근자수	유출 통근자수	유입-유출 통근자수	유입 통근자수	유출 통근자수	유입-유출 통근자수	유입 통근자수	유출 통근자수	유입-유출 통근자수
전라북도	8,048	5,044	3,004	9,642	6,874	2,768	10,628	9,088	1,540	15,709	12,530	3,179
전주시	15,814	23,045	-7,231	15,402	30,500	-15,098	15,390	42,929	-27,539	13,203	47,860	-34,657
군산시	6,719	4,882	1,837	6,427	5,875	552	7,983	6,190	1,793	10,192	6,907	3,285
익산시	8,989	8,583	406	11,295	10,062	1,233	10,503	12,866	-2,363	12,664	13,941	-1,277
정읍시	3,560	2,213	1,347	3,848	2,629	1,219	4,837	2,587	2,250	4,656	2,375	2,281
남원시	2,148	1,162	986	2,783	1,352	1,431	2,644	1,665	979	2,639	1,110	1,529
김제시	4,959	4,657	302	7,315	3,935	3,380	8,648	3,791	4,857	9,785	3,578	6,207
완주군	5,184	7,112	-1,928	7,923	7,334	589	16,667	7,702	8,965	19,625	7,171	12,454
진안군	1,751	189	1,562	2,707	410	2,297	2,585	361	2,224	2,523	252	2,271
무주군	916	39	877	1,010	142	868	1,188	75	1,113	1,275	171	1,104
장수군	805	147	658	1,064	174	890	1,311	198	1,113	1,418	283	1,135
임실군	2,071	705	1,366	2,310	847	1,463	3,561	546	3,015	3,564	590	2,974
순창군	830	411	419	1,182	488	694	1,891	440	1,451	1,774	384	1,390
고창군	1,570	290	1,280	2,054	534	1,520	2,360	707	1,653	2,534	611	1,923
부안군	2,079	956	1,123	2,438	708	1,730	2,906	877	2,029	3,075	655	2,42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년에서 201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 자료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4. 전라북도 시군별 지역노동시장 독립성과 직주불일치

박진희(2005)는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기초로 전국 238개 시군구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통근 유출입행렬을 구축하고, 통근 유출입 비율 75%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인용하면 2000년 당시 전라북도의 6개 시, 8개 군은 노동수요와 공급 자급비율 모두가 75%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각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연간과 2012년 2분기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2008년에는 완주군, 2012년 상반기에는 완주군·임실군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75% 미만, 김제시 75.82%로 나타났는데, 이들 시군은 전라북도 수위도시 전주시에 인접한 지역들이다. 즉 앞서 살펴본 1995~201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인되는 전주시의 역통근량 확대는 인접 시군의 지역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밖의 시군에서는 같은 기간 군산시·익산시·남원시·무주군·장수군에서는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유사하거나 약간 높아졌고, 정읍시·진안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에서는 유입 통근자의 수는 늘어났고 노동수요 자급비율은 낮아졌지만, 노동수요 자급비율은 모두 75% 이상을 나타냈다.

표 7.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한 전라북도 시군 단위 지역노동시장 독립성 분석

행정구역	노동수요 자급비율(%)	노동공급 자급비율(%)	행정구역	노동수요 자급비율(%)	노동공급 자급비율(%)
전주시	91.9	85.1	진안군	87.5	98.7
군산시	92.9	94.2	무주군	94.9	98.9
익산시	89.7	92.8	장수군	95.3	98.4
정읍시	93.0	94.9	임실군	91.3	91.7
남원시	93.2	95.5	순창군	95.1	97.6
김제시	85.1	90.8	고창군	94.0	98.2
완주군	77.3	77.8	부안군	91.2	97.5

자료: 박진희(2005), p.63.

표 8.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전라북도 시군 단위 지역노동시장 독립성 분석 (단위: 명, %)

	2008년 연간 자료						2012년 2분기 자료					
	행정구역 기준 취업자	사업체소 재지기준 취업자	유출 통근자	유입 통근자	노동수요 자급비율	노동공급 자급비율	행정구역 기준 취업자	사업체소 재지기준 취업자	유출 통근자	유입 통근자	노동수요 자급비율	노동공급 자급비율
전주시	256,201	224,012	49,069	16,880	92.46	80.85	286,366	247,109	54,736	15,479	93.74	80.89
군산시	113,635	118,666	6,119	11,150	90.60	94.62	124,457	129,590	6,481	11,615	91.04	94.79
익산시	131,710	133,138	12,584	14,012	89.48	90.45	122,298	123,097	10,954	11,753	90.45	91.04
정읍시	50,520	53,350	1,722	4,553	91.47	96.59	51,126	53,636	2,562	5,073	90.54	94.99
남원시	41,423	44,019	815	3,411	92.25	98.03	42,468	43,116	1,409	2,057	95.23	96.68
김제시	42,723	48,332	3,653	9,262	80.84	91.45	44,679	52,620	4,784	12,725	75.82	89.29
완주군	39,084	46,285	7,871	15,072	<b>67.44</b>	79.86	38,142	49,842	10,109	21,809	<b>56.24</b>	<b>73.50</b>
진안군	14,585	16,095	490	1,999	87.58	96.64	13,246	15,305	344	2,403	84.30	97.41
무주군	13,275	14,779	179	1,684	88.61	98.65	13,063	14,428	228	1,594	88.95	98.25
장수군	12,595	14,585	191	2,180	85.05	98.49	12,567	13,439	205	1,076	91.99	98.37
임실군	16,008	19,151	857	4,000	79.12	94.65	14,779	18,814	1,216	5,252	<b>72.09</b>	91.77
순창군	15,120	16,302	357	1,540	90.55	97.64	15,100	16,965	501	2,367	86.05	96.68
고창군	31,040	32,867	402	2,229	93.22	98.70	30,091	32,089	742	2,740	91.46	97.54
부안군	29,404	30,565	436	1,597	94.77	98.52	28,936	31,121	992	3,178	89.79	96.57

주: 굵게 표시한 항목은 노동수요·공급 자급비율 75% 미만을 의미함.

한편, 지역노동시장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은 등질적인 노동력을 전제로 한 단일시장으로 존재한다고 보다는 노동력과 일자리 간에 각기 다른 특성의 배분이 존재하는 다양한 다수의 하위, 부분 혹은 분절된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박영한 등, 2001). 따라서 각 지역노동시장의 하위시장에 대해서도 독립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노동조사'에서 제공되는 항목 중 첫째 임금근로자와 종사상 지위,

둘째 산업분류, 셋째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통해 독립성을 판단하였다.

### 1) 임금근로자와 종사상 지위 기준 노동수요 자급비율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준으로 임금·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

표 9. 2012년 2분기 전라북도 시군별 종사상 지위 기준 종사자 수와 노동수요 지급비율

	사업체 소재지기준 전체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수(명)					종사상 지위별 노동수요 지급비율(%)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전주시	247,109	179,690	99,588	61,174	18,928	67,419	92.96	92.44	93.95	92.48	95.81	
군산시	129,590	90,214	62,131	19,284	8,798	39,377	89.91	87.17	94.49	99.18	93.63	
익산시	123,097	80,079	53,577	18,121	8,381	43,018	87.17	85.40	92.64	86.65	96.57	
정읍시	53,636	28,629	16,940	8,036	3,654	25,007	83.79	76.90	96.53	87.77	98.27	
남원시	43,116	18,152	10,487	4,835	2,830	24,965	91.84	89.84	97.82	89.05	97.69	
김제시	52,620	24,306	13,996	7,788	2,522	28,314	<b>58.07</b>	<b>45.54</b>	76.54	<b>70.59</b>	91.05	
완주군	49,842	29,760	21,222	5,803	2,735	20,082	<b>35.59</b>	<b>26.28</b>	<b>65.83</b>	<b>43.65</b>	86.85	
진안군	15,305	5,940	3,603	1,443	895	9,364	<b>67.42</b>	<b>68.24</b>	<b>65.48</b>	<b>67.21</b>	95.01	
무주군	14,428	5,318	3,288	1,314	716	9,110	82.50	80.45	98.51	<b>62.50</b>	92.72	
장수군	13,439	5,150	2,861	1,349	940	8,288	83.66	75.32	94.67	93.26	97.16	
임실군	18,814	7,690	4,914	2,065	711	11,124	<b>46.39</b>	<b>32.32</b>	77.15	<b>54.30</b>	89.85	
순창군	16,965	5,908	4,041	1,221	646	11,057	<b>66.41</b>	<b>55.48</b>	100.00	<b>71.28</b>	96.54	
고창군	32,089	11,612	6,620	2,248	2,744	20,477	79.63	79.81	98.82	<b>63.45</b>	98.17	
부안군	31,121	11,129	5,171	2,967	2,991	19,992	80.75	77.43	98.50	<b>68.87</b>	94.82	

주: 굵게 표시한 항목은 노동수요 지급비율 75% 미만을 의미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군별 노동수요 지급비율을 재구성하면 표 9와 같다.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 근로자 기준에서 14개 시군 모두에서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75% 이상을 넘어 대부분 90% 안팎의 수준이었다. 이것은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구직형태가 취업이라기보다는 창업에 해당되기에 직주가 인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임금 근로자는 전주시 인접의 김제시와 완주군·임실군 이외에도 진안군·순창군의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를 다시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는 5개 시군, 임시 근로자는 2개 시군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8개 시군에서 노동수요 지급비율 75% 미만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의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낮다는 점은 해당 일자리의 상당수가 다른 시군 거주자 노동공급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지역 경제 승수효과가 낮아질 개

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용직의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낮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당 시군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노동공급의 규모가 작다는 점과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듯하다. 즉 해당 군 지역과 김제시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작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과 계절적 변동성이 큰 일용직에 공급될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산업과 직업분류 기준 노동수요 지급비율

다음으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서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80% 이상이었다. 그리고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분류와 연관되어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 그리고 농림어업의 숙련 종사자들의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거의 모든 시군에서 높게 나타

표 10. 2012년 2분기 전라북도 시군별 산업분류 기준 노동수요 지급비율(%)

	농림어업 (A)	광공업 (B, C)	건설업 (F)	도소매·음식숙박 업(G, I)	전기·운수·통신·금융 (D, H, J, K)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E, L-U)
평균	95.21	77.73	84.93	93.12	88.99	85.70
전주시	98.19*	93.84	90.46	94.86	94.88	93.26
군산시	96.35*	88.31	93.76	92.69	89.06	90.29
익산시	98.85*	88.85	87.57	93.01	89.76	87.09
정읍시	98.17	95.14	90.80	96.45	82.84	79.73
남원시	99.82	96.84	83.79	98.10	97.23	89.84
김제시	90.59	59.19	<b>52.97</b>	86.01	<b>65.20</b>	<b>61.54</b>
완주군	84.97	<b>28.42</b>	<b>34.26</b>	81.12	<b>63.51</b>	<b>50.66</b>
진안군	94.22	<b>51.29</b>	76.00*	99.22	<b>64.72</b>	<b>73.46</b>
무주군	99.70	<b>37.77*</b>	<b>67.11</b>	79.24	100.00*	91.27
장수군	97.21	78.83	<b>63.11</b>	95.64	<b>69.28*</b>	88.89
임실군	89.04	<b>59.95</b>	<b>68.46</b>	96.30	<b>65.12</b>	<b>38.72</b>
순창군	98.61	<b>70.36</b>	90.14	88.91	<b>46.86</b>	<b>68.64</b>
고창군	94.97	82.08	76.33	87.44	96.76	86.68
부안군	97.52	75.62	<b>57.93</b>	89.68	83.72	87.02

주: 상대표준오차(C.V.)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굵게 표시한 항목은 노동수요 지급비율 75% 미만을 의미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11. 2012년 2분기 전라북도 시군별 직업분류 기준 노동수요 지급비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평균	80.17	79.39	92.59	96.55	84.62	90.39
전주시	91.14	93.90	95.02	97.99*	93.01	95.54
군산시	86.63	87.14	93.30	96.58*	88.95	98.58
익산시	78.07	85.88	94.54	99.37*	93.29	90.21
정읍시	<b>74.61</b>	<b>74.53</b>	92.74	99.84	92.97	93.46
남원시	87.26	93.20	95.00	99.81	91.56	96.42
김제시	<b>41.21</b>	<b>54.47</b>	81.98	93.17	<b>67.36</b>	78.18
완주군	<b>42.76</b>	<b>30.40</b>	<b>68.02</b>	89.42	<b>35.26</b>	<b>55.61</b>
진안군	<b>44.61</b>	78.13*	99.39	96.92	<b>68.42</b>	<b>68.16</b>
무주군	<b>74.98</b>	78.73*	80.19	99.69	<b>65.33</b>	98.53
장수군	<b>73.60</b>	93.10	91.28	97.17	<b>74.35</b>	95.65
임실군	<b>22.36</b>	<b>46.09</b>	80.11	88.75	<b>68.22</b>	<b>71.32</b>
순창군	77.02	<b>45.61</b>	82.83	94.32	<b>61.20</b>	93.58
고창군	88.23	<b>74.77</b>	92.01	99.47	85.68	<b>74.18</b>
부안군	<b>61.91</b>	77.49	94.63	98.62	<b>73.62</b>	93.90

주: 상대표준오차(C.V.)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굵게 표시한 항목은 노동수요 지급비율 75% 미만을 의미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났다.

한편 그 밖의 산업과 직업분류에서는 크게 시와 군 지역으로 양분되어 노동수요 자급비율에 차이가 있다. 산업분류에서 김제시, 직업분류에서 김제시·정읍시를 제외하고 전라북도 시 지역은 각 산업과 직업 분류 기준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군 지역은 상당수 산업과 직업에서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게다가 광공업과 이와 연계된 기능·기계조작·조립 직업의 종사자에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앞서 검토했던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완주군은 제조업 종사자 수가 약 2천명 이상 늘었지만,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매우 낮은 30% 미만이고, 감소·정체한 진안군과 무주군은 각각 51.3%, 37.8%, 그리고 170명 내외 증가한 임실군·순창군·부안군도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의 존재를 확신하기 어렵다. 장수군·고창군에서만 제조업 종사자 수가 173명, 114명 늘었고, 노동수요 자급비율도 75% 이상이었을 따름이다.

### 3) 임금 기준 직주일치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 모수추정을 위해 사후층화하였을 때 시군·성·연령 변수를 사용한 집계 승수를 제공하고, 2012년 1분기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 고용지표와 산업·직업·종사상 지위를 추가하여 보정한 것이어서 임금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다만,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전라북도 내 사업체에 취업한 임금근로자 6,348명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시군의 임금근로자 표본에서 거주지 행정구역과 사업체소재지 행정구역 코드가 일치하는 취업자를 직주일치로 간주하고, 그 비율을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만 일정한 경향은 확인되었다. 즉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직장과 주

표 12. 빈도분석을 통한 2012년 2분기 전라북도 임금 기준 직주일치 비율

(단위: 명, %)

	전체 표본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표본수	직주일치	표본수	직주일치	표본수	직주일치	표본수	직주일치	표본수	직주일치
전라북도	6,348	1,373	94.6	2,593	88.2	1,304	80.9	649	81.4	429	61.5
전주시	1,020	142	82.4	457	70.9	237	70.5	84	71.4	100	69.0
군산시	765	91	96.7	289	95.2	207	89.4	120	83.3	58	60.3
익산시	659	93	93.5	289	84.8	151	75.5	67	82.1	59	55.9
정읍시	592	159	98.1	239	97.9	100	88.0	57	82.5	37	73.0
남원시	445	100	97.0	186	94.1	91	87.9	43	90.7	25	92.0
김제시	378	76	93.4	180	84.4	71	73.2	32	59.4	19	10.5
완주군	427	91	94.5	136	80.9	101	73.3	56	60.7	43	16.3
진안군	248	78	98.7	98	92.9	34	88.2	26	88.5	12	83.3
무주군	319	67	98.5	131	100.0	56	92.9	53	94.3	12	100.0
장수군	362	158	100.0	125	92.0	54	88.9	18	88.9	7	71.4
임실군	250	72	93.1	107	88.8	34	61.8	25	88.0	12	75.0
순창군	262	58	100.0	120	97.5	49	81.6	26	92.3	9	66.7
고창군	325	88	84.1	115	93.9	68	80.9	34	94.1	20	85.0
부안군	296	100	97.0	121	95.9	51	96.1	8	87.5	16	56.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거지가 같은 행정구역인 표본의 비율이 높았다. 또 100만원 미만 임금 취업자의 대부분, 100~200만원 미만에서는 절반 정도가 비상용직 지위의 종사자였다. 한편 직장과 주거지가 불일치하는 표본들에 대해 각각 주거지 행정구역을 추가로 추적하면,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에서는 서울·경기·광주 등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임금이 높아질수록 직주불일치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서 임금 300만원 이상에서 약 10~20%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시군의 직주불일치 표본에서는 주거지가 전주시인 경우가 가장 잦은 빈도였고, 행정구역을 연결한 시군 간에도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잦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주시에 인접한 완주군·김제시·임실군은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라 할 수 없다. 2000년 자료를 통한 선행 연구에서는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으로 평가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직주불일치 비율은 높아졌고 승수효과는 기대보다 낮게 이루어질 개연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취업자 기준에서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 지역들도, 지역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노동시장을 임금·비임금 근로자,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분류 등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상당수 하위시장들이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산업분류의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직업분류의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에서는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75% 이상이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나머지 산업 및 직업분류 항목에서는 상당수가 그 미만이였다. 셋째 이처럼 비독립적인 하위 노동시장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군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임금 근로자보다 비임금 근로자, 기반 부문보다는 비기반 부문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들로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유효 수요와 소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 일자리의 상당수는 이미 다른 시군 거주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빈도분석이라는 방법적 한계가 있지만, 낮은 임금수준에 취업한 이들의 직주일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임금은 개인의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 소비자서비스업으로 파급되기에 임금수준과 승수효과는 비례관계에 있다. 따라서 높은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동시에 그 일자리 근로자의 소비활동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성장 선순환이 수반될 것이다. 빈도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5. 전라북도 시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가?

이제 앞서의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함께 그보다 선행시점 자료를 동일하게 분석하여 시계열적 변화 추세와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된 이유로 해당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008년의 경우도 2012년 2분기와 마찬가지로 비임금 근로자, 산업분류에서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리고 직업상 서비스·판매 및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준에서 14개 시군 모두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75%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기준에서는 2012년 2분기와 유사하게 시군 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했다. 표 13과 같이 시군별로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몇몇 기준들을 중심으로 두 시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확하게 확인되는 변화의 추세를 찾기가 어렵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 등은 2012년 2분기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기준에서 75% 이상의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노동수요 지급비율 증감이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변화되어서,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일관성을 읽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우선 비교한 두 시점이 3년 반 정도의 단기간이었던 것이 우선되는 원인일 것이며, 아울러 여러 하위노동시장들이 독

표 13. 노동수요 지급비율(%)의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연간과 2012년 2분기 자료 비교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상용직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전주시	90.7	92.4	89.6	93.8	83.6	90.5	90.0	94.9	95.0	93.3	92.1	91.1	91.4	93.9	89.7	93.0
군산시	87.7	87.2	89.0	88.3	79.0	93.8	90.4	89.1	89.4	90.3	83.3	86.6	90.2	87.1	88.7	89.0
익산시	84.8	85.4	82.5	88.9	<b>69.1</b>	87.6	89.8	89.8	89.8	87.1	<b>72.7</b>	78.1	82.9	85.9	90.0	93.3
정읍시	82.3	76.9	88.1	95.1	77.1	90.8	88.2	82.8	81.2	79.7	<b>67.4</b>	<b>74.6</b>	80.2	<b>74.5</b>	89.3	93.0
남원시	82.4	89.8	86.9	96.8	95.4	83.8	82.0	97.2	81.0	89.8	<b>72.2</b>	87.3	81.9	93.2	85.4	91.6
김제시	<b>55.6</b>	<b>45.5</b>	<b>61.4</b>	<b>59.2</b>	85.3	<b>53.0</b>	<b>71.4</b>	<b>65.2</b>	<b>57.3</b>	<b>61.5</b>	<b>48.9</b>	<b>41.2</b>	<b>56.7</b>	<b>54.5</b>	<b>72.0</b>	<b>67.4</b>
완주군	<b>41.1</b>	<b>26.3</b>	<b>42.2</b>	<b>28.4</b>	<b>54.1</b>	<b>34.3</b>	<b>61.2</b>	<b>63.5</b>	<b>43.2</b>	<b>50.7</b>	<b>27.1</b>	<b>42.8</b>	<b>37.6</b>	<b>30.4</b>	<b>53.1</b>	<b>35.3</b>
진안군	<b>54.1</b>	<b>68.2</b>	85.5	<b>51.3</b>	100.0	76.0	<b>50.7</b>	<b>64.7</b>	<b>64.5</b>	<b>73.5</b>	<b>59.5</b>	<b>44.6</b>	<b>61.1</b>	78.1	<b>62.3</b>	<b>68.4</b>
무주군	<b>72.0</b>	80.5	<b>53.8</b>	<b>37.8</b>	93.9	<b>67.1</b>	<b>50.5</b>	100.0	77.2	91.3	<b>68.8</b>	<b>74.9</b>	<b>66.9</b>	78.7	<b>62.5</b>	<b>65.3</b>
장수군	<b>55.8</b>	75.3	84.2	78.8	<b>56.4</b>	<b>63.1</b>	<b>51.0</b>	<b>69.3</b>	<b>65.3</b>	88.9	<b>41.0</b>	<b>73.6</b>	<b>58.3</b>	93.1	<b>72.9</b>	<b>74.4</b>
임실군	<b>48.6</b>	<b>32.3</b>	98.6	<b>60.0</b>	<b>37.5</b>	<b>68.5</b>	<b>53.4</b>	<b>65.1</b>	<b>53.6</b>	<b>38.7</b>	<b>51.5</b>	<b>22.4</b>	<b>46.4</b>	<b>46.1</b>	<b>57.9</b>	<b>68.2</b>
순창군	85.7	<b>55.5</b>	<b>53.2</b>	<b>70.4</b>	<b>46.6</b>	90.1	94.4	<b>46.9</b>	82.6	<b>68.6</b>	<b>71.2</b>	<b>77.0</b>	<b>74.6</b>	<b>45.6</b>	<b>63.3</b>	<b>61.2</b>
고창군	<b>71.5</b>	79.8	<b>72.9</b>	82.1	77.5	76.3	100.0	96.8	81.0	86.7	<b>63.9</b>	88.2	91.7	<b>74.8</b>	89.7	85.7
부안군	81.2	77.4	85.0	75.6	83.2	<b>57.9</b>	76.2	83.7	84.7	87.0	80.4	<b>61.9</b>	82.2	77.5	82.1	<b>73.6</b>

주: 굵게 표시한 항목은 노동수요·공급 지급비율이 75% 미만을 의미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립적이지 못한 시군 대부분은 지속된 인구유출로 경제활동인구 등 노동력 공급 부문의 규모가 작아서 비교적 작은 고용지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변화 양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박진희(2005)의 주장과 같이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가'라는 논의의 양극단에는 지역 간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하므로 지역단위 노동시장이 의미가 없다는 지역부정가설(negative hypothesis on regional-ity)과 지역 간 경제력 편차와 상이한 노동수요 구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조성된다는 지역긍정가설(positive hypothesis on regionality)이 있는데,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라북도 시군에서의 그 시계열적 변화는 둘 중의 어느 것도 채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단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지만 여전히 해당 시군의 일자리 상당수는 다른 시군의 노동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승수효과는 다른 지역에서의 노동력 공급량과 부의 관계에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주일치 비율에는 비례하고, 직주불일치 비율에는 반비례하고, 특히 기반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이런 상관관계는 강화, 확대될 것이다. 2008년 연간과 2012년 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사업체소제지를 기준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증감과 해당 종사자들의 직주불일치 변화를 탐색하면 표 14와 같다. 두 시점동안 정읍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증가하였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증가한 9개 시군에 대해 다시 직주불일치 증감을 살펴보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는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늘고 직주가 불일치한 제조업 종사자의 수는 줄었지만, 완주군·군산시 등 7개 시군에

표 14. '지역별고용조사' 사업체소재지 기준 2008년 연간과 2012년 2분기의 제조업 종사자수와 직주불일치 변화

(단위: 명, %)

	2008년 제조업 종사자수	2012년 2분기 제조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A)	제조업 종사자 중 직주불일치 증감(B)	(B) ÷ (A) × 100	비고
전주시	18,132	19,639	1,507	-716	-47.5	
군산시	23,176	26,600	3,424	549	16.0	
익산시	22,457	25,262	2,805	-421	-15.0	
정읍시	6,232	5,333	-899	-484		일자리 감소
남원시	3,359	2,889	-470	-347		일자리 감소
김제시	6,462	6,075	-387	3		일자리 감소
완주군	12,528	16,977	4,449	4,910	110.4	
진안군	475	1,278	803	554	68.9	
무주군	445	979	534	397	74.3	
장수군	645	824	179	73	40.8	
임실군	627	1,301	673	512	76.1	
순창군	1,056	1,259	203	84	41.4	
고창군	1,738	1,231	-507	-310		일자리 감소
부안군	807	1,398	591	341	57.6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15.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중 2008년 이후 취업자 표본자료에 대한 빈도 분석

(단위: 명, %, 만원)

	표본수	학력			종사상 지위		임금					
		고교 졸업 이상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월평균 임금	
		고졸	대졸이상									
전주시	792	82.8	40.7	42.2	81.4	39.2	34.8	45.8	15.2	2.5	1.6	122.2
군산시	579	75.5	38.5	37.0	82.6	51.9	32.5	41.5	19.7	4.8	1.6	133.6
익산시	491	77.8	40.9	36.9	81.3	49.9	36.3	42.8	17.1	2.9	1.0	119.6
정읍시	476	63.2	36.3	26.9	73.3	37.5	56.9	34.0	6.5	1.7	0.8	82.7
남원시	367	66.5	35.7	30.8	75.2	38.0	49.9	36.8	9.5	2.7	1.1	101.6
김제시	325	68.6	37.8	30.8	77.2	35.5	44.9	41.2	9.5	3.4	0.9	105.8
완주군	338	69.5	37.9	31.7	76.6	36.7	49.1	31.4	15.1	4.1	0.3	104.9
진안군	210	54.3	33.3	21.0	64.3	37.0	66.7	25.7	5.7	0.5	1.4	69.9
무주군	280	58.6	38.9	19.6	57.9	36.4	63.9	27.1	6.8	2.1	0.0	67.4
장수군	367	44.1	28.6	15.5	70.8	32.3	70.0	23.7	5.2	0.3	0.8	62.9
임실군	218	62.8	43.1	19.7	73.9	28.6	56.4	33.0	8.3	2.3	0.0	86.3
순창군	231	62.3	39.0	23.4	61.0	38.3	59.7	33.8	4.8	1.3	0.4	71.6
고창군	300	54.0	30.3	23.7	66.0	35.4	58.7	30.7	9.3	1.0	0.3	77.4
부안군	355	52.1	34.6	17.5	56.9	26.2	67.0	25.6	5.6	1.4	0.3	63.3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해당 종사자 중 직주가 불일치하는 이들의 수도 늘었다. 해당 7개 시군에 대해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과 제조업 종사자 중 직주불일치 증감의 비율을 구해보면, 완주군이 가장 높은 110.4%, 군산시가 가장 낮은 16.0%였다. 물론 제조업 일자리 증가량에 대해 산출된 비율만큼 지역 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곧바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일자리가 해당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노동공급으로 점유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시군 대부분은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지역들이다.

물론 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일정 정도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구직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과 관련된 학력, 임금 근로자와 상용직 등 지위,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또한 시군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조사 시점 당시 해당 사업체에 근무한지 3년 반 이하, 즉 2008년 이후 취업한 5,329개 표본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면, 고학력, 임금 근로자 및 상용직, 높은 임금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군산시를 필두로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시군에서는 비율이 높고, 그 반대의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시군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이 확인된다. 특히 평균 임금의 경우, 군산시와 장수군·부안군에서는 그 격차가 두 배 이상이었는데, 이는 소득과 소비활동을 매개로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력의 격차도 그 만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요약과 결론

이 연구는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

일치 정도를 분석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정책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주불일치의 정도, 즉 낮은 수준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은 창출된 일자리가 해당 지역 내 노동력 공급이 적거나, 일자리를 쫓아 새로운 인구·노동이동이 일어난 정도가 낫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행정구역을 지역노동시장 단위로 설정하여 우선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임금·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하위노동시장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완주군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김제시도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시군은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75% 이상이었지만, 다시 하위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상당수 시군이 각 기준에서 독립성이 낮았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는 하위노동시장이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시군은 종사상 지위의 상용직, 산업분류의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이 지역 및 하위노동시장의 독립성이 낮은 시군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1차 산업 중심의 군 또는 시 지역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낙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 노력에 따른 성과들이 지역 내로 파급되지 못한 채 다른 시군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아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 시군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가적으로 분석했던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간주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하지 않은 일자리, 최소한 임금 기준에서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 위주로 창출되었다. 결국 일자리 양극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의 창출량이 많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선순환으로 전환되기 어려움을 의미할 것이다.

한 지역에 몇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정책·개발의 노력이 일자리 개수 위주의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양적 지표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발전이고, 정책으로 투입되는 국가나 지역, 사회적 노력의 혜택은 특정인이 아닌 해당 지역과 그 공동체 전체의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라북도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하거나 높이는 노력, 창출된 일자리를 매개로 인구·노동유입을 유도하는 노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이미 설정한 상태로 노동수요 자급비율에 따른 독립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행정구역을 넘나들어 형성될 수 있는 기능지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 권역설정을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각 시군 노동수요 자급비율의 높고 낮음만 분석되었고, 창출된 일자리로 공급되는 노동의 기원지와 역통근, 근로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자리 창출의 지역 경제 승수효과의 공간적 파급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박진희(2005), 이병훈·윤정향(2010) 등 선행연구에서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독자적인 완결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구역 간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 연결비율(link ratio) 등 추가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 이 연구의 한계이며, 이것은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 주

- 1) 부분·하위노동시장이 분절, 분단되는 단위가 기업인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 등 기업 단위에서 분절되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기업들 자체가 내부적으로 유연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노동시장과 고용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의 일자리와 고용 조건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Rosenberg(1991)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다양한 조건과 처지에 놓인 노동자층이 나타나고, 노동시장은 단순한 분절을 넘어 유연화, 파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Atkinson(1987)은 기존 분절시장론의 기업 내부노동시장에 기업의 유연화 전략을 결합시켜 유연한 기업(flexible firm)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유연한 기업의 의미는 각 기업들이 과거 외부시장에 비해 좋은 조건의 등질적이었던 내부시장을 다시 핵심과 주변으로 구분하고 핵심 노동력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을, 주변 노동력에 대해서는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노동비용의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 단위의 분절에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더 세분화된 분절이 나타남을 의미하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분절은 기업이 아닌 일자리 자체를 단위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국가 경제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급화론과 양극화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고급화 논의로는 Freeman과 Katz(1994)가 제시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대표적이다. 이는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과 일정 정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와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경쟁심화의 상황 아래,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혁신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상위 일자리의 비중을 늘렸지만 낮은 숙련도의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되게 만들며, 그 결과 산업구조가 고숙련 위주로 재편되며, 같은 산업 내에서도 학력별 취업자의 비중이 고학력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utor 등(2006)은 정보통신기술이 선진국의 노동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일자리 고급화가 아닌 양극화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노동 수요를 추상적 노동(abstract work) 수요, 추상적 노동을 보좌하는 반복적·일상적 사무노동과 육체노동 수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의 비일상적 육체노동으로 분류하였다. 세 가지 노동 수요 중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기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반복적·일상적 사무노동과 육체노동이며, 그 결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일자리는 양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는 고급화론보

- 다는 양극화론의 경향이 지지를 받고 있다.
- 3) 국제노동기구(ILO)는 ‘괜찮은 일(decent work)’,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노동의 질(quality in work)’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추상적이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해외와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 4)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승수와 인구유입의 효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들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된 과소지역들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정책목표도 노동이동의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도 인구유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일자리에서 얻어진 임금소득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어 지역 소비자서비스업으로 승수효과가 파급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 5) 권상철(2005)의 연구에서 5대 광역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역통근비율이 각각 11.7, 15.1, 33.0, 14.8, 15.4%인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전주시의 경우 2010년 약 19.5%였던 것을 감안하면 광역시가 아니지만 유사한 수준의 역통근비율이다.
  - 6) 최근의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시군은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군산시·옥구군, 이리시·익산군 등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전국과 전라북도의 많은 시군이 통합된 것과는 달리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에 이르지 못한 것도 행정구역 기준에서 완주군의 지역노동시장이 독립적이지 않은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곽철홍·이전, 1997,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진주 도시권지역의 통근-역통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3-34.

권상철, 2011,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 이동, 통근자 자료 분석을 통한 도시화 단계의 실증적 검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536-553.

남기성·오민홍, 2010, “노동수급 자급률 측면의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1559-1569.

박영한·이정록·안영진(譯), 2001, 노동시장의 지리학, 한울아카데미, 서울(Fassmann H. und Meusbürger P., 1997, *Arbeitsmarktgeographie: Erwerbstä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m räumlichen Kontext*, B.G. Teubner, Stuttgart).

박원석, 1990, 공간적 분업과 지방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구미공업단지 섬유·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희, 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노동리뷰, 10, 60-70.

이동우·김광익·박은관·문정호, 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국토연구원, 안양.

이병훈·윤정향, 2010,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간적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2), 141-165.

이상일, 1999, “기능지역의 설정과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지리·환경교육, 7(2), 757-783.

이상호, 2008,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이원호, 2002,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과정과 소득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87-207.

이정섭, 2012,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사회적 증가 추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6(3), 301-319.

Atkinson, J., 1987, Flexibility or Fragmentation? The United Kingdom Labour Market in the Eighties, *Labour and Society*, 12(1), 87-105.

Autor, D. H., Katz, L. F., and Kearney, M. S.,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Casado-Diaz, J. M., 2000,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9(2), 201-221.

Fischer, M. M. and Nijkamp, P., 1987, Spatial labour market analysis: relevance and scope, in Fischer, M. M. and Nijkamp, P.(ed.), *Regional Labour Market*, North-Holland.

Freeman, R. and Katz, L. F., 1994, Rising Wage Inequality: the United States vs Other Advanced Countries, in Freeman, R.(ed) *Working under Difference*

- Rules*, Russel Sage Foundation and NBER.
- Kaldor, N., The case for regional policies,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3), 337-348.
- Peck, A. J., 1996, *Work-Place: The Social Regulation of Labor Market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Rosenberg, S., 1991, From Segmentation to Flexibility: A Selected Surve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3, 71-79.

교신: 이정섭,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 (이메일: yisup@jbnu.ac.kr, 전화: 063-270-4631)

Correspondence: Chung Sup Lee,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e-mail: yisup@jbnu.ac.kr, phone: +82-63-270-4631)

최초투고일 2013. 3. 25

수정일 2013. 4. 11

최종접수일 2013. 4. 17